보도자료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6. 10. 28.[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차도순 을지원국 국장 / 오재현 선임비서관(민병덕 의원실) 02-784-9540

2026 을지로위원회 민생과제 국정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문

2026년 10월 28일 (수) 10: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먹튀·담합·탈취… 국감으로 드러냈고,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바로잡겠습니다’
2026년 을지로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
K자 양극화 시대, ‘을(乙)’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병덕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乙들은 K자 양극화라는 두 개의 분리된 경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 절반이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가게는 열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고, 사장님들은 빚을 안고 문을 닫았습니다. 소득격차도 최근 6년 중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K자 양극화, K자의 윗선과 아랫선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황의 이익은 납품단가와 플랫폼 수수료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과실을 나중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몫이 나뉘도록 규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들의 피해 회복을 넘어, K자 양극화 시대에 아랫선이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올해 국정감사에 앞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 규제·감독과 배달앱 수수료, 문화·택배·건설 분야의 불공정, 기술탈취,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 등 7개 분야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 과제들과 더불어 대형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와 제지업계 담합 문제도 함께 짚었습니다.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가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문제와 후속 조치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MBK-홈플러스, 정유4사, 인산가, CJ ENM>

MBK에 대한 제재 지연은 MBK의 '먹튀'를 돕는 것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이 7월 2일 MBK 중징계안 심의를 끝냈지만 금융위는 98일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는 점포 126개에서 67개로 직원은 1만 9천 명에서 9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답보 상태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30만 민생의 문제인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을지로위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정유사 담합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복담합 관련 입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쟁은 돈벌이 기회가 아닙니다. 국민이 기름값에 신음할 때 정유사 내부에서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말이 나왔고, 주유소는 전량구매계약에 묶여 싼 기름을 고를 수도 없었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나온 정유 4사 경영진이 모두 사과하고 거래관행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공정위 위원장은 4월 을지로위원회 상생협약 이행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복담합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일입니다. 국감 이후 관련 법률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산가 기술탈취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중소기업 씨디에스글로벌이 2009년 납품한 죽염 용융로 도면으로 인산가가 2016년 자기 명의 특허를 냈습니다. 2023년 특허법원이 반환을 판결했지만 인산가는 상고했고, 창업주는 소송 중 세상을 떠났으며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기술의 부당이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고,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술탈취를 당한 을들이 판결을 기다리다 쓰러지지 않도록, 소송 중에도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CJ ENM과 중소 완구업체 간 불공정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매출 5조원 CJ ENM이 매출 전부를 자신에게 의존하는 완구업체 엑스오플레이에 신비아파트 사업을 제안해 개발자료를 받은 뒤 6일 만에 조건을 바꿨고, 최종 계약에는 최소보증금 14억 4천만 원과 광고 4억 8천만 원 구매를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신고를 '민원'으로 분류해 "자료 미비"로 종결했습니다. 공정위 위원장은 계약 과정도 봐야 한다는 지적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가게 공지도 마음대로 못 쓰는 배달플랫폼 사장님들의 애로사항인 플랫폼 금지어 문제도 다뤘습니다.
배달의민족 입점 사장님이 가게 공지에 '쿠팡이츠', '수수료', '할인',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쓰면 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점주는 금지어 목록조차 모르고, 플랫폼은 대외비라며 국회에도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위원장은 플랫폼이 규칙을 유리하게 정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끝까지 요구하고 챙기겠습니다.

〈배달앱 · 불공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배달 플랫폼의 민낯은 ‘혁신’이 아닌 ‘약탈’이었습니다.

돈가스 하나를 팔면 플랫폼이 수수료와 배달비로 절반을 떼어갔습니다. 플랫폼들은 ‘무료 배달’로 생색을 내며 유료 구독자를 모으고, 그 출혈 비용은 고스란히 영세 입점업체에 떠넘겼습니다.
외식물가 폭등과 자영업자 폐업 도미노의 주범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쿠팡은 사법부 판단마저 무시한 채 공정위의 정당한 현장조사를 가로막고도 누가 지시한 일인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잦은 시스템 먹통으로 영세 점주와 배달 노동자가 입은 막대한 피해 앞에서도 실질적 보상을 외면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은 배달플랫폼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데이터들을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로 숨기며,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더 이상의 ‘자율규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네 가지 핵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첫째, 판매대금 보호와 사전통지 의무,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한 ‘온라인플랫폼법’으로
기본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음식배달플랫폼법’으로
약탈적 배달비용분담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셋째, 수수료와 정산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생협의체를 의무화하는
‘상생협력법’을 통해 대등한 공정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야간 택배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과 사회보험을 보장하는 ‘생활물류법’으로 과로사 위험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수탈 구조〉

대형 프랜차이즈의 수탈 구조 역시 도를 넘었습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수년 동안 본사 매출이 2배 뛰는 동안, 점주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중에서 89만 원이면 사는 POS 기계를 232만 원에, 159만 원짜리 키오스크를 341만 원에 강매했습니다. 다른 제품을 쓰면 전산망을 차단하는 보복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9,700원에 파는 농축액에 본사 라벨 하나 붙여 3만 9천 원에 파는 등,
40여 개 공산품으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강력한 요구로 공정위의 긴급 현장조사와 엄정한 과징금 제재가 즉각 가동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필수물품 지정’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도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연말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 협의 의무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겠습니다.

〈기업 담합〉

인쇄업계와 함께한 이번 국감을 통해 수십 년간 담합을 반복해 온 제지 대기업 카르텔의 파렴치한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843곳의 영세 인쇄소가 문을 닫고 도산하는 동안, 제지사들은 주사위와 동전을 던져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챙긴 부당이익 뒤에서, 수천억 과징금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로 탕감받는 기만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5월 을지로위원회와 상생협약으로 약속했던 '확정가격 거래제' 마저 온갖 법적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습니다.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혜택 전면 배제, 피해업체를 구제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신설, 현실 물가를 반영한 '인쇄 표준원가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인쇄업계 출혈경쟁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산업 불공정 계약 · 신비아파트〉

'신비아파트' 완구사업을 둘러싼 CJ ENM과 중소 완구업체의 분쟁을 계기로,
문화콘텐츠 상품화 거래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상품화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품화 사업은 디자인과 설계, 금형 제작 등에 선행 투자가 이뤄집니다.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투자 이후 변경되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에 비용과 위험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중소업체가 투자에 앞서 사업 조건과 부담을 충분히 확인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품화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용료와 최소보증금, 상품 승인 절차, 개발 성과물의 권리, 광고비 부담,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등 핵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체부에는 상품화 거래의 계약 관행을 점검하고, 콘텐츠 기업과 상품화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업계에서도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마련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챙기겠습니다. 콘텐츠 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공정한 계약 아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탈취〉

중소기업에게 기술은 곧 생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산자위와 정무위를 중심으로 인산가-CDS글로벌을 비롯한 6건의 주요 기술분쟁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피해기업이 오랜 소송과 입증 부담을 떠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분쟁조정 강화와 공소시효 개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인산가-CDS글로벌 분쟁에서는 2023년 특허법원이 인산가에 특허권 이전등록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후 형사고소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됐습니다. 특허권 분쟁이 수년간 이어지는 사이 형사책임을 물을 시효부터 끝나버리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공소시효 연장과 무권리자 출원의 사전 차단, 신속한 권리회복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해기업들의 기술분쟁 조정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소송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정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6년간 기술·특허분쟁 488건 가운데 약 80%인 386건이 수·위탁관계가 없는 기업 간 분쟁입니다. 현행 상생협력법만으로는 상당수 기술분쟁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상생협력법에 머물지 않고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도 확대 도입돼야 합니다. 피해기업이 증거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증거확보 제도를 넓혀야 합니다.
기술탈취에는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피해기업에는 신속한 증거확보와 손해배상, 권리회복이 보장돼야 합니다.

앞으로 피해기업들의 기술분쟁 조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소시효 개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 등 국정감사에서 촉구한 과제가 실제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및 야간·새벽배송 대책 관련〉

공정한 택배사 간 경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택배·물류 노동자의 과로사, 노동시간과 작업부담을 줄여 막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을 무겁게 다뤘습니다.

과로를 막으려면 노동강도를 낮추고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과로사 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택배사들은 1차 사회적 대화에 불참한 쿠팡을 두고 "쿠팡의 혁신에 진 것이 아니라, 반칙에 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구조라면 노동자의 안전도, 공정한 경쟁도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준은 모든 택배사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쿠팡이 약속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와 분류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잠정 합의한 야간 배송기사 주5일제, 분류작업 배제, 건강진단 의무화, 악천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배송 마감 압박 금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야간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사회보험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생활물류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자율적인 약속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배송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쿠팡의 약속 이행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고,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공공기관 갑질 및 불법, 불공정 하도급 근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건설현장의 불공정·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공공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하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실제 시공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줄어들고, 이는 부실공사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와 LH 등 공공 발주공사에서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이 증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원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LH·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원도급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실제 시공하는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고 시공을 책임지도록 해 공사품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산 에스컬레이터가 국내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부품 수급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짚었습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에도 SK하이닉스의 어음결제 관행 속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60일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금을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은 국가적 지원과 협력업체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 성장의 이익도 협력업체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시공하는 기업과 노동자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설현장을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약속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참고] 기자회견 기획안

❑ **취지**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02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7개 분야 민생과제의 국정감사 결과와 후속 입법·제도개선 계획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 **개요**

○ 제목 : 2026 을지로위원회 민생과제 국정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10시 ~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참석 : 을지로위 소속 국회의원 등

○ 식순

시 간	주 제
10:00~10:02	기자회견 취지 및 참석자 소개
10:02~10:19	낭독 1:: MBK-홈플러스, 기술탈취, 정유4사 등 낭독 2:: 배달앱 불공정 및 대형 프랜차이즈 문제 낭독 3:: 문화산업 불공정 계약 낭독 4:: 기술탈취 낭독 5:: 택배과로사 낭독 6:: 공공기관 갑질
10:19~10:20	마무리